

## 6.4 지방선거 청년유권자네트워크 정책 요구안

- 1) 100% 장기 전세 주택 동네 “렌탈시티 조성”
- 2) 계절학기 수업료, 편입학 비용 줄이기
- 3)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정
- 4) 생활임금 조례 제정,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
- 5) 백수 탈출 지원금 지급 (취업장려 수당)
- 6) 단 하루를 일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 (알바 노동인권 보호)
- 7) 청년의무고용 5% 확대 조례 제정
- 8) 대기업 부럽지 않은 중소기업 사원복지 지원
- 9) 차별금지법 재개정으로 이력서 차별금지 시행
- 10) 동네마다 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
  - 청년 문화예술활동 사업 지원
  - 청년 온/오프 커뮤니티 공간 지원

## 1. 주거

### 1) 100% 장기 전세 주택 동네 “렌탈시티 조성”

#### ○ 배경과 취지

- 현재 수준으로 집값이 안정이 되어도 20, 30대 구매능력이 없음
-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주택공급 방식이 필요
- 소유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상징성 있는 정책이 필요

#### ○ 정책내용

-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자가 되어 100%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
- 렌탈시티내의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분양한 수익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
- 중대형을 포함한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 전·월세의 형태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
-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을 관리
- 임대료는 토지조성비와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책정

#### ○ 효과

- 교육, 교통, 환경등 생활여건이 뛰어난 위치에 실수요자 중심의 장기 전세주택공급
- 여타의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차단
- 주변지역 집값의 불안 요인을 제거
- 소유에서 주거로 주택 개념의 전환
- 이후 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정, 중소 규모의 렌탈타운 형태로 공영개발로 발전

## 2. 대학

### 1) 계절학기, 편입학 비용 줄이기

#### ○ 취지/배경

- 수시 및 편입 응시료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고, 응시하지 않을 경우 반환 되지 않음
- 한 해 편입 응시자 22만4360명 (2007)
- 전국 일반 대학 평균‘입학금’65만원, 사립대학 93만원 (2011)
- 과거 입학식을 위한 실비 수준 이였으나 점점 입학금이 상승하여 과도하게 책정.
- 입학금 사용 내역도 불투명 하며 법적 근거 없음
- 계절 학기 수업료가 대폭 인상하여 학생들 부담 가중
- KIST의 경우 학점 당 2만원 계절 학기 수업료가 10만원으로 5배 인상(2008)
- 계절 학기 수업료는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업료

인상을 제재 할 수 없음

○ 정책내용

-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 범위에 계절학기 수업료를 포함
- 대학 입학금 폐지 또는 입학식을 위한 실비 수준으로 최소화
- 수시 및 편입 응시로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, 응시하지 않을 경우 반환
- 자치 단체장의 권한으로 지방 국립대부터 개선

**3)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정**

○ 취지/배경

-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 이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 지난해 9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'대학 알리미'를 통해 공시한 '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'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15.4%가 학비와 생활비를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음.

○ 목표

-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

○ 방법

-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 및 관련 예산 증각 반영
- 서울시의 경우 소득7분위 이하 전액지원, 다자녀가구 첫째아이 전액 지원. 서울시의 경우 2013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19억63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2만5000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(2012년에는 1만8000명에게 대출금 이자 12억7150억원을 지원).

**3. 노동**

**1) 생활임금 조례 제정,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**

○ 배경

① 최저임금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청년

- 2013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단신근로자의 평균생계비가 151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최저임금(5,210원)에 따른 임금은 월 108만원.
- 비정규, 불안정, 저임금 상태에서 노동하는 환경에 놓인 당사자가 바로 청년노동자.

② 생활임금도입 확산 필요

-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나 지침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있음.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'부천시 생활임금 조례'를 제정, 2014년 생활임금은 5,580원으로 확정하여 부천시 소속 노

동자와 출자·출연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기로 함.

- 이외 성북구와 노원구도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58%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였음.

○ 목표

-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의 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% 수준에서 지급
- 생활임금 조례 제정. 부천시, 성북구, 노원구 등 지자체 사례 확대

○ 방법

- 생활임금 조례 제정

**2) 백수 탈출 지원금 지급 ( 실업 부조 형태, 취업장려 수당 지급)**

○ 배경과 취지

-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평균11개월, 변변한 수입도 없이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을 해야 함
- (고용보험 수혜자가 아닌)미취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획가 적음
- ‘적극적 노동시장’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쏟는 나라일수록 고용이 안정되어 있음 (네덜란드와 덴마크는 GDP의 약 1.6%를 우리나라는 0.18%(2006년)을 투입 / 2004년 ILO)

○ 정책내용

-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한 30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취업 장려금을 지급(지방정부 예산)
- 교육기회와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연수지원금 확대

**3) 단 하루를 일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 (알바 노동인권 보호)**

○ 취지/배경

- 2009년 사실상 백수 408만 명, 매년 증가 (구직 포기,18시간미만 취업자 수 증가 )
-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배제자의 대부분이 파트타임, 계약직, 임시직,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, 영세사업자(의무가입 대상자이지만 실제 가입율이 매우 낮음)
- 대학생들이 꼽는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최저임금미달과 노동착취
- 청소년 알바 고용업소 68% ‘노동법 위반’
- 고용보험에는 임금노동자의 50%이상이 배제되고 있음.

○ 정책내용

-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주당근로시간을 10시간이하로 하향 조정, 보험 적용대상자 확대
- 영세사업자와 시간제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면제

## 4. 고용

### 1) 청년의무고용 5% 확대 조례 제정

#### ○ 배경

##### ① 심각한 청년고용률

- KDI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청년층 고용률은 45%에서 40%로 떨어짐. 고용률 70% 이상 국가에서 청년층 고용률이 40%인 나라는 우리나라 뿐. 그만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한 상황임.

##### ②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과 강화 필요성

- 2013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정원의 3%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함. 2011년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대비 5.5%를 신규채용 하였고, 이 중 3%를 청년으로 채용하였음.
-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인 상황을 감안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한 3% 이상 청년 미취업자 채용을 5%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 있음. 청년채용을 5%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원의 확대가 필요함.
-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청년 범위 규정이 만34세 이하로 확대 되어 정책 대상자가 늘어 났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5%까지 확대 하여 시행 하여야 함.

#### ○ 목표

-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청년의무고용 5% 실현 조례 제정 및 정원확대(중앙정부의 청년고용촉진법을 업그레이드 시켜 지자체에 적용하자는 취지)
-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맺어 재정지원과 함께 청년의무고용 민간영역으로 확대

#### ○ 방법

- 청년의무고용 5% 실현 조례 제정
- 기업에 대한 유인책과 함께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함께 구사해 자원마련에 대한 압력을 줄임
- 청년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, 교육훈련,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과 연동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함.

### 2) 대기업 부럽지 않은 중소기업 사원복지 지원

○ 취지/배경

- 청년들의 취업난에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
- 500인 이상 대기업과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'1980년 7.2%에서 2006년 67.4%로 확대\_노동부
- 인적자원개발 기회 상실 (직업능력개발 참여율 300이상 기업 57.6%, 30인 미만 25.5% / 2006년\_통계청)

○ 정책내용

- 지방정부지원으로 중소기업 종사자의 주택/보육/재교육 여건을 대기업 수준으로 높임
- 주택 :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공단 혹은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는 지역에 지방자치단체(혹은 지방공사)가 렌탈타운을 조성, 중소기업에게 사원아파트로 임대
- 보육 : 중소기업 공단 내 또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
- 재교육 :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및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지원

**3) 차별금지법 재개정으로 이력서 차별금지 시행**

○ 취지/배경

-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(온라인 입력)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
- 2007년 차별금지법 재정시 '학력,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' 등 7개 항목이 제외 됨
- 노동부가 권고하는 표준이력서가 있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없음
- 서울시 표준이력서 사용 기업 확대 필요.

○ 정책내용

- 차별금지법의 재개정으로, 채용에 대한 차별금지 대상의 명확한 기준 마련 (\*2010년 법무부, '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' 출범/ 2014년 4월 아직도 국회 계류 중 )
- 실효성이 있는 법규규정으로 서류 전형시 과도한 개인정보 및 이력 요구 금지
-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합리한 채용 관행 단속
- 지방정부 산하 공공부분 신규채용시 표준이력서 도입

**5. 문화**

**1) 동네마다 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**

- 청년 문화예술활동 사업 지원
- 청년 온/오프 커뮤니티 공간 지원

○ 취지 / 배경

-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성, 청소년, 장애, 노인, 노동자 등 부문·계층별 복지관, 문화센터가 존재하지만 청년을 위한 센터, 기관은 부재한 상황임. (예: 청년복지관, 청년문화예술센터 등 청년을 특성화한 기관이 없음.)

- '청년' 부문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조례, 법이 만들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청년회, 청년센터 형태로 청

년들을 위한 거점이 마련되어 있지만 운영이나 재정 규모가 매우 열악한 상태임.

- 전국의 20~30대를 위한 청년문화예술 활동 증진과 청년모임들을 지원하기 위한 '청년커뮤니티센터'를 건립하여 이들의

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됨.

○ 목표 및 방법

- 지방자치단체장 발의로 '청년 문화예술 활동과 자치활동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' 제정을 통해 읍,면,동별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함.